

아파트 1채에 최대 4명 '분양사기'

광주지방경찰청, 피고소인 15명 수사 진행 중

혐의 부인에 주장 엇갈려...117명 76억원 피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분양사기 의혹과 관련해 15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산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분양사기와 관련 피고소인 신분으로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사 담당자가 잠적했다

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행사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소재는 파악됐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소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추가 고소가 이어

지면서 15명 외에도 추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기준 117명의 피해자가 총 76억원을 편취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7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분 413가구와 일반분양분 413가구 등 모두 454세대다. 조합원 51명은 주소지 이전과 주택 구매 등으로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업무대행사는 부적격세대의 조

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 제안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업무대행사 담당자는 추진위 계좌와 개인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담당자는 아파트 한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계약을 맺어 개인별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신봉우 기자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경기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소장과 법인 변호사를 면담했다.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후원금 유용 의혹' 나눔의집 진상조사 내부고발 직원-시설 운영자 '진실공방'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등 불이익" vs "시설 정상화 업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시민단체 진상조사에서 '공익제보자 불이익' 여부를 두고 내부고발 직원과 시설 운영자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시설 운영자와 내부고발 직원 간 진상공방이 벌어졌다.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시설 운영자와 내부고발 직원 간 진상공방이 벌어졌다.

면담조사에는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나눔의 집 시설 법인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우용호 신임 시설장이 나왔다.

이날 조사는 법인 측이 내부고발 직원(공익제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열렸다.

조사위는 먼저 내부고발 직원을 대표하는 김대일 학예실장을 참석시켜 법인 측의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사례를 청취했다.

김 학예실장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상 직원권한 축소 △내부 고발자 업무배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회유·사주 △직원 감시 지시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 불이행 △후원금 임질금 권한 요구 등 법인 측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진술했다.

조사위 박진 활동가는 "신임 시설장이 오기 전까지는 불이익 조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의 일(학예실장 진술)을 보면 진정이 가능할 것

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현 변호사도 "법인 측 행위는 전형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태 교수는 "비영리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자체 정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 양태정 변호사는 "모두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다. 신임 시설장이 출근을 시작한 때가 지난 22일이다. 시설 현황과 재정상황 등을 파악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며 "시설 정상화를 위해 정상 업무를 한 것인데 불이익이라고 한다. 법인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준 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용호 신임 시설장은 "저는 그냥 바라보는 것인데 상대방은 짜려 보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저는 낙하산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용됐다. 오늘도 출근 3일째다. 한 일이라고는 직원 현황과 재무 현황 파악, 제 책상이 없어서 자리 하나 해달라고 한 것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면담조사는 내부고발 직원이 제기한 '불이익'에 대한 법인 측 입장과 해명을 듣는 방식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후원금 유용 등 나눔의집 운영에 대한 논의는 이날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부고발 직원들은 법인 측의 압력과 괴롭힘을 주장했다. 법인 측은 관련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소녀상에 몸 묶은 대학생들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앉아 있다. 28년간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었던 수요 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선행해 이날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이번엔 꽃집에 혈세를?...광주 북구의원들 또 구설수

겸직 신고 규정 어기고 자신·배우자 명의 꽃집 운영

불법 수의계약과 납품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운 광주 북구의회에서 이번엔 또 다른 구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들이 겸직 신고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혈세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4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꽃·화분 등을 판매하는 A업체와 13건에 걸쳐 490여만원의 꽃다발과 화분 등을 구입했다.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B업체와는 비슷한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250여만원의 화분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무소속 구의원의 배우자, B 업체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대표자로 신고돼 있다.

특히 무소속 의원은 당선 직후 아내가 운영하는 꽃집의 사업자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 신고했다.

B 업체도 4-5년 전 동부시장에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에서 화분 등을 구입한 시기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사업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은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명시된 겸직 신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은 "구정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압력을 가한 적은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될 시 책임을 지고 윤리위 뜻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25일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승연 북구의원은 고향 선배기업의 전산장비를 구정에 납품하도록 지원, 해당 기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북구에서만 6차례에 걸쳐 4억7400만원 상당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